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한 산업협력 방안

홍 순 직 /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 이후 통일에 대비한 남북 산업협력 방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졌다. 더욱이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도 개혁·개방 확대와 기술개건·현대화, 과학기술 강조 등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에 실용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산업 부문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존재한다.

향후 남북한 산업협력의 목표와 기본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상생의 성공적 경험 모델 개발과 정착에 두는 한편, 중기적으로는 북한의 산업 정상화와 개혁·개방, 시장화 등을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

한편 남북 산업협력 추진 전략은 시간적으로는 남북관계 진전과 투자 규모, 북한의 수용 가능성과 자생력 회복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공간적으로는 기존의 남북경협 지역과 북한의 새로운 특구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산업 부문별로는 북한의 부존자원 활용과 함께, '단번 도약'과 성장 잠재력 확충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 같은 전략 하에 우선은 개성공단 지구의 확대와 함께, 산업 별로는 북한의 노동력과 광물자원을 활용한 경공업과 임가공, 부품조립 등의 분야를 먼저 추진하며, 기간산업의 개보수와 현대화를 통한 가동률 제고, 전자·IT(소프트웨어) 산업 부문의 협력 등을 검토 할만하다. 다시 말해 북한의 평양이나 개성, 해주, 신의주 등지와 남한의 대구·경북 지역의 섬유산업과 연계하거나 북한의 원산과 울산 현대중공업의 수리조선산업 협력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상기의 목표와 추진 전략에 비추어 몇 가지 시범사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남북 산업 협력 전진기지 구축과 북한의 개방 선도를 위한 '남북협력형 테크노파크'를 설치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산업기술 분야의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형 시범사업이다. 전자는 남북경협 사업을 활용한 현장 교육 확대와 북한의 개성(섬유류), 신의주(생활산업), 나선(IT 산업) 특구에 새로운 기술 협력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다. 후자는 남북한 산학연 학술교류 확대와 공동연구, 표준화 등 북한의 산업 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해주는 방안이다.

들어가는 말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 이후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경제협력 및 산업협력 방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만약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로 관계가 개선될 경우 남북경협 확대는 필수적이며, 이는 결국 산업 부문에서의 남북간 협력을 수반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북한도 기술진보를 통한 생산 효율 제고를 위해 생산기반 정상화와 인민 생활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기에, 남북한 산업협력은 상호 관심 사항일 수 있다. 북한은 2000년 이후부터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힘 있는 추동력으로 규정하고, 과학기술을 사상, 총대와 함께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원에서 분리하여 내각 직속에 재설치·부활하였고, 기간산업의 정보화와 CNC화를 내세우며 ICT 분야 발전에도 큰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남북간 산업협력은 접촉 과정에서 상호 이해 증진과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남북간 기술력 격차 완화와 산업기술 용어 표준화, 북한의 산업 실태 분석과 협력 방안 모색 등을 위해 많은 현장 방문과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북한의 경제 및 산업 정책 변화 흐름과 특징을 살펴본 후, 남북한 산업협력의 목표와 추진 전략, 그리고 몇 가지 시범 사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최근 북한의 경제 및 산업 정책 변화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특징

최근 북한은 경제-핵 병진 노선 하에 체제 강화를 위해 정치·군사적으로는 당 중심의 국가권력 강화를, 경제적으로는 인민생활 향상과 개혁·개방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다.¹⁾ 특히 경제정책에 있어서 경제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데 박봉주

1) 홍순직·이용화,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특징과 통일에의 시사점』, 한국경제주평 통권 569호, 현대경제연구원, 2014. 5. 19.

총리 중심의 내각 책임제 강화를 통해 인민생활 향상, 외자유치와 대내외 개혁·개방 확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개혁 조치로는 2012년에 6.28 농업개혁 방침과 12.1 기업소개혁 조치를 실시한 데 이어, 2014년에는 초과목표 생산물 배분율을 확대하는 5.30 조치 등을 들 수 있다. 대외 개방 조치로는 5개의 중앙급 경제특구에 이어 2013~14년에는 19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발표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규모’ 특구 개방 정책을 추진한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19개의 경제개발구와는 별도로 2013년 11월에는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를 착공하였다.²⁾

북한은 2015년 신년사의 경제 부문에서도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과 획기적인 인민생활 향상 강조, 이를 위해 농축수산업을 3대 축으로 먹는 문제 해결, 경공업 정상화로 공급 확대 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 문제 해결 지연과 인권문제 등장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의 외자유치 노력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결국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산업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북한의 산업정책 변화 특징

최근 북한의 산업정책 기조는 2000년대의 기조를 유지하되, 보다 실용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2000년대 북한의 산업정책 기조는 ‘기술개진³⁾, 현대화, 과학기술 강조’로 특징 지워진다. 이는 기술개진을 통해 기존 설비의 가동률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선형 부문(농업, 석탄, 전력, 철도운수, 금속)의 생산을 정상화하려는 정책 기조이다. 이는 특정 부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분야의 대형 설비를 신설하여 해결하려던 1980년대까지와는 다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 기간에는 대형 신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⁴⁾ 그러나 2000년 후반에는 2012년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석탄화학공업과 금속공업 등 대규모 설비 투자가 다시 재개되었다.

2) 2013년 10월에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화교자본들과 중동의 설계·토목 분야의 외국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조성했으며, 이들 외자기업들의 관심 부문은 북한 내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 건설사업임. 이들은 사업 추진을 위해 ‘평화경제개발그룹’을 설립함.

3) 기술개진이란 공장·기업소들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노후설비의 보수·정비·교체와 생산공정의 자동화 등임.

4) 이석기, 『북한의 산업 현황과 남북한 협력 방향』, 현대경제연구원 목요포럼 자료, 2014. 3. 18.

한편 북한은 강성대국 추진 원년인 1998년부터 4 차례의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연이어 수립하여 과학기술에 의한 생산 현장 지원과 첨단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⁵⁾ 북한은 제3차 과학기술 5개년계획(2008~12)을 통해 강성대국을 건설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최근에는 대규모 공장 건설보다는 생산 현장 지원 중심과 IT, BT 등의 첨단과학기술과 인민경제 선행 부문에 대한 집중 현상이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수립된 제4차 5개년계획(2013~17)에는 먹는 문제와 에너지 문제 해결 및 지식경제 육성에 필요한 첨단기술이 더욱 강화되었다. 다시 말해 이전의 ‘인민생활 개선·향상’을 먹는 문제 해결로 보다 명확히 하면서 농업과 축산, 과수, 수산 등의 핵심 분야에 집중하였다. 또한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선대에서 추진하던 산업 전반의 CNC화(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컴퓨터 수치제어)를 더욱 강화하고, 정보통신망 구축과 IT 산업 육성, 전자상거래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는 상대적으로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대규모 설비투자의 속도를 조절하고 경공업, 농업, 건설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화학공업에서는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나프타 비료공정을 석유화학 기초물질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전환하였고, 경공업 부문에서는 경공업 공장의 직접적인 건설 및 현대화보다 식품가공 부문과 관련된 과수, 축산부문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졌다. 특히 김정일시대에 역점을 두었던 주체철을 통한 금속 공급 증대 정책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에는 거의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다시 말해, 김정은 제1비서는 성과가 있는 부문(농업),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부문(건설)이나 그럴 자신이 있는 부문(농업), 상대적으로 자원을 덜 투입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부문(경공업) 등에 자원을 집중하고, 중화학 공업의 설비확충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 시대의 산업정책은 중장기적으로는 북한경제의 회복과 성장 역량 확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실용주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⁶⁾

5) 이춘근·김종선, 『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시사점』, STEPI INSIGHT,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9. 1. pp. 9~10.

6) 이석기, 전제서.

〈 북한 국가과학기술계획의 주력 연구과제 변화 〉

제2차 5개년 계획 (2003~07)	제3차 5개년 계획 (2008~12)	제4차 5개년 계획 (2013~17)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선 (에너지 문제 해결과 기간산업 정상화 등 8개 부문의 53개 대상)	인민경제 4대 선행 부문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에너지문제 해결 (전력생산, 전기절약)
	인민경제의 개선, 현대화 (자원, 채취, 기계, 화학, 건설자재, 국토환경)	공업주체와, 현대화 (금속, 화학, 석탄, 기계, 전자, 건설 자재, 경공업, 국토환경, 도시경영)
인민생활 개선 (7개 부문)	식량문제 해결 (농업, 수산업, 경공업, 보건)	먹는 문제 해결 (농업, 축산, 과수, 수산)
첨단과학기술 (5개 부문 37개 대상)	첨단과학기술 (IT, NT, BT, 에너지, 우주, 해양, 레이저/플라즈마)	첨단기술 비중 제고 (IT, BT, NT, 신소재, 신에너지, 우주)
기초과학 (4개 부문)	기초과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기초과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자료 : 이춘근·김종선, 『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시사점』, STEPI INSIGHT 제173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9. 1. p. 9.

향후 북한의 경제·산업 정책 방향 전망

북한은 향후 체제 유지와 가시적인 경제성과 도출을 위해 중단기적으로 ‘외자유치를 통한 개발 촉진 전략’을 지속할 것이며, 이로 인해 북한에게 있어서 남북간 산업협력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2016년 5월의 제 7차 당 대회 개최를 전후하여 경제성과 도출을 위해 더욱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현재 북한 경제는 ‘빈곤의 함정’⁷⁾에 빠져 있어 외부의 지원 없이는 자력으로 회생이 쉽지 않은 상태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오늘날 북한경제의 침체와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는 폐쇄적 계획경제 시스템 자체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자본 부족과 설비 노후화, 선진 기술 도입 미흡, 전력과 원부자재 공급 부족, 물류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최근 북한은 대외 개방과 외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남한에 대해서도 종전의 단순 지원이나 저임 노동력에 의존하는 임가공 위주의

7)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 빠진 경제란 국내의 생산수준이 너무 낮아서 국내 저축으로는 자본의 감가상각을 보전하지 못하는 경제를 의미함. 따라서 외부로부터 지원이 없으면 이러한 경제는 계속해서 더 가난해 지거나 소위 빈곤 속의 균형이라는 지점에 도달하여 계속 가난 속에서 살게 됨(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경제협력보다는 ‘북한 경제의 회복과 지속 발전’을 위한 대규모 경제협력을 원하고 있으며, 자신을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협 파트너’로 인정해주길 원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와 본격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그 방향은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 산업협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 산업 협력의 목표와 추진 전략

남북한 산업협력의 목표와 기본 방향

남북한 산업협력은 우선 상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고 성과 도출이 용이한 분야를 중심으로 먼저 추진한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본격적인 산업협력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북 간의 상호 신뢰 회복과 다음 단계의 보다 심도 높은 산업기술 협력의 토대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 산업협력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북한의 산업 정상화 지원과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란 중장기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첫째, 남북 산업협력의 방향을 단기적으로는 남북 상생의 성공적 경협 모델 개발과 정착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남북경협 사업 복원 및 활성화, 그리고 민생 분야 지원 등을 통해 남북 상생(win-win)의 성공적 경협 모델 개발과 정착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초기의 남북간 산업기술 협력은 남한의 지원이 불가피하고 북한의 반발(기술협력을 기술지도로 오해)이 예상되므로 일방적 지원보다는 남측 기업들의 경협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계 추진하는 것이 남북한 양측 모두의 공감대 형성에도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남북 산업협력의 중기 목표는 북한 경제의 산업 정상화와 개혁·개방, 시장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신설 공장이나 설비, 인프라 건설보다는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시 말해 현재의 30% 내외의 산업 가동률을 50% 이상으로 향상시켜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전력과 에너지, 노후화된 설비 개보수와 현대화 지원 등을 통해 공장 가동과 생산 공정의 정상화 및 현대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과 산업 선정에 있어서는 기존 특구(개성·금강산 등지) 및 북한의 새로운 특구정책 방향과 연계하는 한편, 북측이 우선 유치를 희망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호응과 개혁·개방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 북한의 대남 경험 희망 분야 〉

분야	희망 분야	주요 사업
생활 기반	주민 생활	- 평양 생활집 단장 사업 공장(페인트, 사시, 유리창) - 상하수도 및 농수로 정비 사업
산업 경제	제철소	- 남한 제철소로부터 하청 공장화 사업
	선박 해체	- 낡은 선박 해체 작업을 통한 철근 이용
	자동차	- 중고 자동차 수입 및 정비소 사업
	협동 농장	- 해주 지역에 협동 농장 사업을 통해 계약 재배
	금융 합작	- 개성공단 내 남북 합작은행 설립
에너지	발전소 개보수	- 평양 화력발전소 개보수
	중유 저장소	- 평양 인근의 중유 저장소 건설
	풍력발전소	- 풍력발전소(동해안 및 개마공원) 건설 - 태양열 난방 시설 건설
SOC 사업	철도 개보수	- 평양~신의주, 개성~평산 및 금강산~원산
	고속도로 개보수	- 개성~평양~신의주, 평양~원산 - 평양~묘향산~자강도 희천
	항만 현대화	- 남포항 시설 현대화(크레인 교체, 비상전력시설 등)
물류	물류 창고	- 대규모 물류 센터 건립 (개성, 신의주 등)
	내륙 물류사업	- 냉동 탐차를 이용한 택배 및 물류 시스템 구축

자료 : 홍순직, "경협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모색",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2009. 3.

- 주 : 1) 상기 내용은 2008~09년간 방북한 사업자 등을 통해 북측 파트너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임.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북한 당국의 외자유치 우선 사업 부문과 유사
2) 2008년 이후의 남북관계 정세와 2010년 5.24 제재 조치 등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한 경제협력은 중단되었기에, 상기 희망 분야는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최근 북한이 경제개발구와 마식령 지구의 관광사업 등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기에 이 분야와 연계된 부문은 추가 가능

셋째, 남북 산업협력은 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염두에 추진해야 한다. 남북 산업협력을 통해 남북 간의 경제력 및 산업

기술력 격차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실현함으로써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을 염두에 둔 한반도 종합개발계획과 균형 발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동북아 경제권(동북아 FTA) 형성과도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통일을 염두에 두고 남북한 산업 구조조정과 한반도 종합개발계획(물류망 구축, 산업 재배치, 국토 균형 발전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주변국인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 등도 고려해야 한다.

남북한 산업협력의 추진 전략

남북한 산업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는 점진적·단계적 추진을, 공간적으로는 기존의 남북경협 지역 및 북한의 새로운 특구와 연계, 그리고 산업 부문별로는 북한의 '단번 도약'과 성장 잠재력 확충 분야 등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시간적으로는 점진적·단계적 추진으로 상생(win-win)의 성공모델을 발굴하여 정착·확산시켜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 남북관계 진전과 투자 소요 규모 그리고 북한의 수용 가능성과 자생력 회복 등을 고려하여 북한의 산업화 역량 확충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의 역점 분야는 인민생활 향상과 과학기술 중시, 외자 유치 부문이다. 따라서 노동력을 활용한 경공업 부문의 공급 확대로 생필품난 해소는 물론, 수출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자본(seed money) 확충 등으로 북한 경제의 자생력 회복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동력과 지하자원, 관광자원 등의 부존자원 개발을 활용한 외화 가득 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화 자본을 북한 스스로 축적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간적으로는 기존의 인프라 활용과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남북경협 지역과 북한 특구 지역(경제개발구 포함)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남북경협 지역 활용의 경우는 개성공단 지구의 확대가 적극 요구된다. 개성공단은 개성~서울~인천의 삼각경제벨트 형성이 가능하며, 기투자한 인프라와 남북협력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 용이하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19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 가운데 원부자재와 노동력 조달의 용이성, 인프라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남측의 지자체 및 지역 특화산업단지 등과 연계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섬유산업의 경우, 북한의 평양이나 개성·해주, 신의주 등지와 남한 대구·경북 지역의 화학섬유 및 화섬직물, 염색 가공 산업등과 연계한 남북 산업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리조선 산업의 경우에는 북한의 원산과 울산의 현대중공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함직하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간 지역별 산업특성과 인프라, 국토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통일한국의 종합산업지도'를 구상할 필요도 있다. 이외에도 투자 재원 조달은 물론, 사업의 안정성과 국제화 제고 측면에서 주변국 및 국제기구 등과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다자간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 부문별로는 북한의 부존자원 활용과 함께, 단번 도약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역점을 뒤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 노동력과 광물자원을 활용한 경공업 및 임가공, 부품조립 등의 분야에서 우선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경공업 분야에서 초보 단계에서는 섬유·의류·신발 등 생활관련 산업의 단순임가공에서 점차 시설 임가공 분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시설 임가공 협력 사업은 자본 투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물론, 기술 이전 과정에서의 산업기술 협력과 기술인력 양성에도 보탬이 된다.

다음으로는 중공업·SOC 분야의 선택적 현대화와 첨단산업 분야의 병행 추진이 요구된다. 북한 경제가 지속발전 가능한 산업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철강 및 비철금속 등의 소재 산업과 전기·전자 및 기계, 정유 산업 등의 기간산업 병행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의 첨단화와 디지털화로 북한경제 단번 도약을 위해서는 전자 및 IT 산업(소프트웨어)의 육성이 필요하며,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과 항만 및 전력 확충 등 인프라 부문은 남북경협 지역과 연계한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적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다만 중공업·SOC 분야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대규모 자본 투입이 요구되므로, 남북관계와 북핵 진전 정도에 따라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다.

넷째, 북한 노동력에 대한 산업기술 교육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의 교육 인프라 지원으로 북한의 노동생산성과 산업기술 역량을 향상시켜 남북 산업협력의 잠재력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 인력 교육 프로그램 지원 추진과 함께, 개성공단 내에서의 중간간부 양성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 북한이탈 주민의 경제·기술 교육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이들의 고용 인센티브제를 확대하고, 이들의 중간간부 양성과 탈북 지식인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창업 지원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남북한 산업협력 시범사업 제안

상기의 산업협력 추진 전략에 비추어 몇 가지 시범사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남북 산업협력 전진기지 구축과 북한의 개방 선도를 위한 ‘남북 협력형 테크노파크’를 설치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산업기술 분야의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형’ 시범사업이다.

첫번째 시범사업은 기존 남북경협 사업을 활용한 현장교육 확대와 함께, 북한 경제특구에 새로운 기술협력 거점(남북협력형 테크노파크)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구 지역으로는 북한의 중앙급 특구인 개성, 신의주, 나선 지구를 우선 검토할 수 있으며, 이들 지역별 역점 산업으로는 섬유의류(개성), 생활산업(신의주), IT 산업(나선)을 제안한다.

먼저 개성공단 사업 확대를 통한 산업기술 협력 및 인력양성 방안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기술교육센터(TTC : Technical Training Center) 활용 및 기술협력클러스터(테크노파크) 조성을 추진한다. 실제 개성공단 경험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교육은 별도의 기술교육보다 상대적으로 북한의 반발이 덜할 것이므로 고부가 가치 상품 생산을 위한 기술협력을 협의하고, 이를 통한 가시적 기술협력 성과(생산량과 북측 고용자 수 증가)를 제공하여 북측의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험 현장에서 전문교육 습득에 대한 인센티브(교육기간 중 급여 지급과 자격증 취득 후의 자격수당 지급 등)를 제공함으로써 기술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중앙급 특구 이외에 북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에도 기술교육센터(TTC : Technical Training Center)의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평양의 은정 첨단기술개발구를 비롯하여 청진 경제개발구와 홍남 공업개발구 등에 기술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이들 지역의 산업기술 발전과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개성공단 이외의 북한 내륙지역이나 접경지역의 경협 현장을 중심으로 업종별 기술교육센터(TTC) 조성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점차 산업별·지역별 합동 산업기술 협력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평양과학기술대학을 활용한 기술교류 및 기술훈련 프로그램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시범사업으로는 산학연 학술교류 확대와 공동연구, 표준화 등 북한의 산업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남북 산업협력 활성화의 기반구축형 사업의 추진을 제안한다. 이들 시범사업으로는 산업분야별로 학술 교류와 정보 교류, 공동 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기술서적과 교육용 비디오와 TV 등 교육시설 및 기자재 제공, 남북한 공동연수단 구성 및 해외 시찰단 파견과 연수 지원, 남한의 지자체와 북한의 지역별 경제개발구와의 주요 시범사업 추진, 남북 대학간·기업간 공동 연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예컨대 남한의 KAIST, 포항공대, 서울대 등과 북한의 김책공대 및 평양과학기술대학과 등과 공동 연구를 모색하거나 POSCO와 김책연합기업소 등과의 공동 기술 협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남북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북한의 수출산업 육성 방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남북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으로는 주요 산업별 기술용어 표준화 작업과 함께, 산업인프라 시스템(교통·물류 체계, 전력체계 등)의 표준화 및 국제화 추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수출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경공업 및 노동집약적 산업, IT산업(소프트웨어) 등을 의화가득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統**